#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44호 1판 (음력 5월 26일)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 영산강 하굿둑 열리나

## 영산강환경청, 상시 개방 결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 내년 6월까지 1단계 연구 결과…공청회 등 거쳐 종합대책

영산강 하굿둑이 35년여 만에 개방될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 하굿둑 축조 이후 환경 변화와 수생태계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영산강 하굿둑의 상시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산강 죽산보 등 4대강 6개 보(洑)에 대한 상시 개방 지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발주한 4억원 규모의 '영산강 하구 수질 및 수생생태계 개선 조사·연구'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목포해양대 연구팀이 선정됐다.

연구팀은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는 영산강 하굿둑 축조이후 환경변화 조사와 수생태계 복원 대안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영산강 하구 수질·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내년 6월까지 1단계로 수환경 기초조사 및 해수유통시 영향 예측 조사를 한다. 하굿둑 배수갑문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에 따른 해수 유통시 염수침투 범위, 영산호 주변 저지대 및 농경지 침수 범위·피해 규모 예측,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문제, 영산호 퇴적물 방류에 따른 수질 변화, 해수 유통시 개선되는 수질·수생태계 효과, 경제성 분석 등을 연구한다.

1단계 연구 결과가 나오면 2단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산강환경청과 전남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계와 연계해 하구 생태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낙동강·금강 등에서도 해수유통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 하굿둑 해수 유통은 시민·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가 전남도도 긍정적 입장을 보여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남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월 전남도 간부회의에서 "'영산강 하굿둑의 문을 절반쯤 열자'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추진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질 개선사업을 한발 앞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하굿둑으로 바닷물이 드나들지 못해 강물이 고이면서 미생물은 죽고 갯벌은 썩어가고 있다"며 "우선 수문을 완전 개방하고 점차적으로 하굿둑은 물론 죽산보·승촌보도 허물어야 영산강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 하굿둑은 길이 4350m, 최대높이 20m, 저수량 2억 5000만t의 방조제다. 강물에 바닷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둑으로, 지난 1978년 착공해 1981년 12월 완공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더위 잊은 노인건강타운 아쿠아로빅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18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타운을 찾은 노인들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文대통령 反부패 드라이브…첫 타깃은 방산비리

## 靑, 유관기관협의회 열어

## 정무수석실 문건도 정조준

## 8·15 특별사면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반(反)부패·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 타깃은 방산비리가 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사정기관별 역할 분담과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유관기관협의회가 방산비리 척결의 방향과 틀을 세우면 수사는 검찰이 하게 된다. 검찰은 일단 수리온 헬기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전 정부 청와대 생산 문건도 반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 정부 문건 300여건을 발견한 데 이어 14일 전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문건 중에는 삼성지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내용 분석이 끝나지 않은 1107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간략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직·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 문건의 폭발력에 따라 정권 초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참여정부 때 신설됐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소집되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정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다. 대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두 기구의 기능이 상당 부분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날 법무·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격 실태점검에 나선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8·15 광복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작업 내년부터 시작

# 전일빌딩 10층 원형 보존 5·18공간 활용

## 광주시·시도민대책위' 26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면담

1980년 5월 정신이 배어 있는 옛 전남도청과 신군부의 무자비한 살육 증거인 '헬기 기총소사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의 원형 보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대책위 상임위원장, 김영정 대책위 집행위원장, 5·18단체 대표들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면담을 갖는다.

시와 대책위는 도 장관과의 면담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내고, 정부 차원의 복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예산 규모와 연차별 계획 등을 확정, 정부에 건의한 뒤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증언을 수집하는 전담반(TF)도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전문가 자문과 함께 본관과 민원실, 별관 경찰청, 상무관 등 옛 전남도청의 내·외부에 대한 복원 기초자료 조사, 민주평화교류원 공사 당시 자료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TF팀이 밝힌 복원안에 따르면 시민군 상황실이었던 옛 전남도청 본관은 2층 회의실 연결통로와 상황실, 방송실을 복원하고 시민군이 보초를 섰던 별관은 내부 공간을 복원하게 된다. 또 희생자 수습장소였던 경찰청은 현 방문자센터를 철거하고 내부공간을 복원하며, 또 다른 희생자 안치장소였던 상무관은 내·외부 공간을 복원하게 된다. 이 밖에 시민군들의 활동 무대였던 경찰청 민원실은 내·외부공간을 모두 복원한다.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 10층을 원형 보존해 교육·기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안도 나왔다. 지난 5월 출범한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전담반'(TF)이 이달 초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 구성안을 마련했다.

TF는 탄흔 177개가 발견된 옛 전일방송 기자재실을 포함한 전일빌딩 10층 전체를 원형 보존하되 전시공간으로 꾸며 관람객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세웠다. 투명한 마감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탄흔 훼손을 막고 관람객 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탄흔이 나오지 않은 10층 다른 공간은 가상현실(VR) 체험공간과 미디어·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관으로 꾸며 5·18 역사교육 콘텐츠 등으로 채운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오는 10월 말까지 전일빌딩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부터 공사를 본격 시행한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와 전일방송 사옥으로도 유명한 전일빌딩은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1980년 현재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를 갖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